

부시 대통령이 퇴임 전에 답해야 할 질문

전 성 훈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미 국무부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정권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20여개의 다른 제재장치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북한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은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와병설로 취약해진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의 살바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북한 지도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하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미국을 굴복시켰다고 선전할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핵폐기 2단계인 불능화신고가 완료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사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차기 6자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한 검증의 윤곽에 살을 붙이고 완성된 합의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양측의 합의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조차 이견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처에 깔려 있는 '말의 지뢰밭'을 통과해야 하는 검증협상은 "악마는 자세한 것에 있다"라는 경구를 뼈저리게 간직하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 국무부가 주장하는 대로 철저한 검증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문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핵문제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검증합의문에 대한 협상을 간헐적으로 지속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남은 임기 중에 외교적인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 고위층의 강박관념이라고 본다. 국내외적으로 이렇다 할 업적이 없고 이라크 전쟁의 부담만 가중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와 같이 제1기 정부에서 견지했던 원칙을 대부분 포기하고 대북 협상에 매달렸다. 오죽하면,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낸 볼튼이 9월 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런 행태를 "광란의 정치적 업적 만들기"(legacy frenzy)라고 비판했을까?

물론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국익 혹은 동맹의 이익을 훼손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 말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제네바 기본합의라는 자신의 업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숨겼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까지 시도했었다. "클린턴의 정책은 안된다"는 뜻의 "ABC"(Anything But Clinton)라는 구호아래, 클린턴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며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오늘날 클린턴의 나쁜 행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한의 원칙적 검증수용 입장을 맞바꾼 이번 합의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가 당선되어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한

다 하더라도 부시에게 감사하기 보다는 부시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정치에서는 차별화를 통한 선명성의 부각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맥케인이 당선 되는 경우 이번 합의의 후유증은 더 클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원칙을 천명해 온 맥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사실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번 합의를 공화당 인사들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번 합의는 공화당 인사들에 의해서 “미국판 전임사장의 대못 박기”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진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김정일 정권의 핵포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지켜보라며 비판론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이제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당신은 김정일이 정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